

| 이슈페이퍼 2020-04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최효미

1. 서론
 2.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3. 세부사업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최효미 연구위원

◆◆ 요약 ◆◆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살피볼 필요성이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실제 투입 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재정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양육부담 완화에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재정 투입의 확대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개별사업별로는 전반적으로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지원 대상의 확대와 같은 세부사항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음.
-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자 규모의 확대를 전제한 상태에서 일가정 양립 부문의 강화 및 현행 비용 지원 체계와 기초의 유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확장 및 재원 확보 등이 요구됨.

1 서론

가. 문제제기

- 극심한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육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 2010년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¹⁾은 4조 4,334억원이었고, 2017년에는 13조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 2019)」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1) 산출 기준은 중앙재정(교육부 예산 제외) + 교육재정으로 구성됨.

2,626억까지 무려 약 3배가량 증가하였음(최효미 외, 2019: 69).

- 이와 같은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의 급속한 증가는 2013년을 전후한 무상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제도의 정착과 맞물려 있음.

- ◆ 보육 및 유아교육의 보편 지원의 확산으로 인해 이 시기를 전후하여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이 크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앙정부 육아정책 사업 예산 중 양육지원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임(최효미 외, 2019: 72).

- ◆ 2018년 9월 이후 아동수당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아동수당 홈페이지, 2020. 5. 6 인출), 2019년도 이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음.

- 그러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분야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 ◆ 그 간 저출산 지원 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양육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방점이 놓여 있었음(대한민국정부, 2016).

- ◆ 정부의 정책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이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육아정책 또한 이러한 기조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된 바 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 이와 같이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 이는 향후 육아정책분야의 패러다임 전환 시에 어떠한 방식으로의 재구조화(재정 투입에 있어서의 조정)가 국민들의 정서에 보다 부합하며 정책 체감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를 진단하기 위함임.

- ◆ 또한, 향후 진행되는 정부의 육아정책 기조의 변화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임.

나. 분석 자료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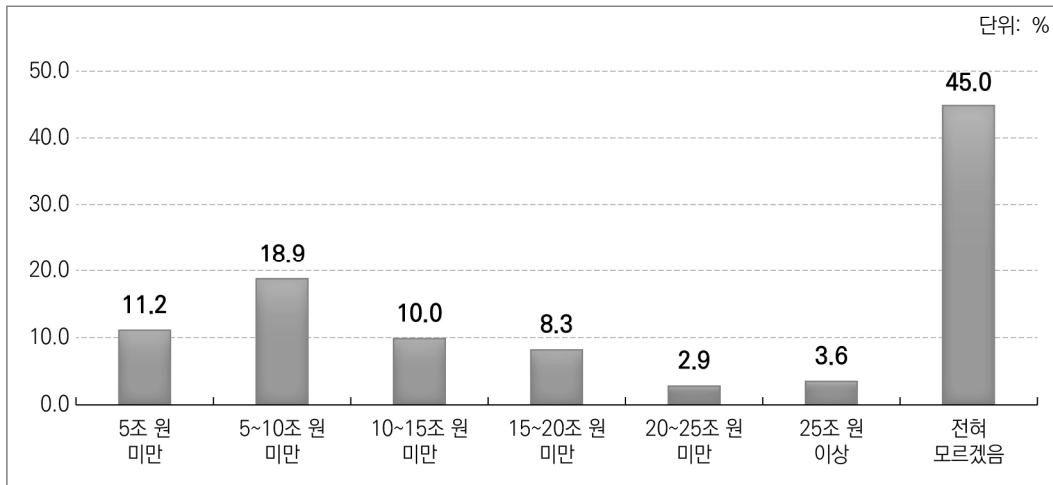
- 본고는 최효미 외(2019)에서 실시한 대국민(1,055명) 인식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 ◆ 대국민 인식 조사의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10.3%(109명), 30대 48.9%(516명), 40대 36.0%(380명), 50대 이상 4.7%(50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 49.3%, 여성 50.7%임.
- ◆ 응답자 중 미혼자는 21.1%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40.6%임.
- ◆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0~3세 자녀가 있는 경우가 243명, 4~6세 자녀가 있는 경우 179명, 7~8세 자녀가 있는 경우 126명, 9~12세 자녀가 있는 경우 220명, 13~18세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256명임.²⁾

2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는 응답이 45.0%에 달하며 높은 비중을 보임.
- ◆ 육아정책분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느냐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으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는 2017년 기준 적게는 11조 8,867억원에서 17조 7,274억원에 달함(최효미 외, 2019: 69).
- ◆ 대국민 조사 결과 육아정책분야 투입 규모에 대해 구간 값을 응답한 경우에도 5~10조원을 응답한 경우가 1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조원 미만 11.2%였음.
- ◆ 즉, 일반 국민의 경우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의 규모를 아예 인지를 못하거나 실제 보다 상당히 작게 투입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2) 복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산 수치가 유자녀 가구 수보다 많음.



[그림 1]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인지

주: 응답자는 1,055명임.

■ 응답자에게 육아정책분야(보육, 유아교육, 저출산,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투입된 실제 재정 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9조원가량을 고지한 이후, 이러한 재정 투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부족한 편(부족한 편+매우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60.1%에 달함.

- ◆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실제 투입 규모가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더욱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 다만,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첫째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첫째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첫째 자녀가 9~12세 사이인 경우에는 충분한 편이 36.3%, 13~18세의 첫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41.5%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 이는 대국민 조사의 특성상 본인의 혜택 여부 등이 정책에 대한 선호와 의견에 반영되는 현상으로 보임.
- ◆ 한편 정치 성향(주관적 응답)에 따라서는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16.3%에 달하는 반면, 진보층에서는 5.3%만이 과도하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임.

〈표 1〉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의 적정성

단위: 점, % (명)

구분	평균점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적정성				계	
		과도한 편	충분한 편	부족한 편	매우 부족한 편		
전체	2.4	8.5	31.4	49.2	10.9	100.0(1,055)	
첫째 자녀 연령	0~3세	1.9	0.7	15.9	60.3	23.2	100.0(151)
	4~6세	2.2	6.2	21.0	60.5	12.3	100.0(81)
	7~8세	2.3	7.9	25.0	60.5	6.6	100.0(76)
	9~12세	2.4	8.1	36.3	46.0	9.7	100.0(124)
	13~18세	2.6	11.8	41.5	43.1	3.6	100.0(195)
	F / χ^2	19.663***	78.156***				
정치 성향	보수	2.6	16.3	34.6	40.4	8.7	100.0(104)
	중도	2.4	8.9	32.7	49.8	8.6	100.0(474)
	진보	2.3	5.3	30.4	54.7	9.7	100.0(247)
	정치성향 없음	2.3	7.8	28.3	46.1	17.8	100.0(230)
	F / χ^2	5.139**	28.883***				

** $p < .01$, *** $p < .001$.

■ 육아정책분야 예산투입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이 4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유아교육이 31.9%로 가장 높음.

- ◆ 예산 투입이 확대가 필요한 분야가 없다는 응답은 41명(3.9%)에 불과하며, 예산 투입의 축소가 필요한 분야가 없다는 응답은 559명(53.0%)에 달하여, 전반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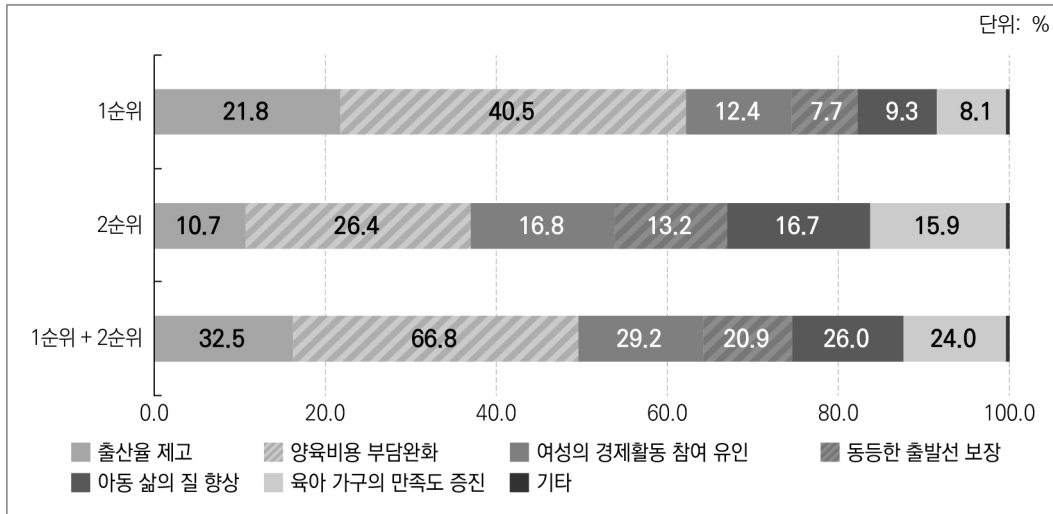
〈표 2〉 육아정책 분야 예산투입 확대/축소가 필요한 분야

단위: %(명)

	보육	유아 교육	돌봄 취약계층	일가정 양립	기타 저출산	계
투입 확대가 필요한 분야	2.4	8.5	31.4	49.2	10.9	100.0(1,014)
투입 축소가 필요한 분야	28.8	31.9	23.2	27.6	24.4	100.0(496)

■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1+2순위 합산 응답 기준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66.8%로 가장 높음.

- ◆ 양육비용 부담 완화는 1순위 응답 뿐 아니라 2순위 응답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그림 2]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주: 응답자는 1,055명으로, 1+2순위는 2,110명에 대한 응답 값임.

- 한편 육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용지원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시간 지원이 27.1%로 다음을 차지함.
- ◆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모든 연령 구간에서 직접적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낮아지는 반면에 의료 등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 ◆ 이는 현재 육아가구에 대한 직접적 비용 지원이 어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호를 결정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 앞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가장 우선시하며, 지원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 비용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고려할 때, 현행 지원 제도 중에서는 아동수당 제도가 육아 가구들에게 있어 가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일 것으로 사료됨.³⁾

〈표 3〉 육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단위: %(명)

	육아 가구에 직접적인 비용 지원	육아를 위한 시간 지원	의료 등 서비스 지원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관 지원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음	계	
전체	41.5	27.1	9.1	18.0	4.3	100.0(1,055)	
첫째 자녀 연령	0~3세	53.6	25.2	4.0	15.9	1.3	100.0(151)
	4~6세	48.1	28.4	3.7	13.6	6.2	100.0(81)
	7~8세	38.2	32.9	5.3	21.1	2.6	100.0(76)
	9~12세	44.4	25.8	11.3	16.9	1.6	100.0(124)
	13~18세	32.3	26.2	16.9	20.5	4.1	100.0(195)
χ^2			40.385***				

*** $p < .001$.

- 육아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9~12세까지는 육아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13~18세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응답도 21.7%에 달함.
- ◆ 그러나 오히려 첫째 자녀의 연령이 13~18세인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 구간 (13~18세)까지 육아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0%에 그쳤음.

〈표 4〉 육아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 연령

단위: % (명)

		평균 연령	육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 연령					계
			0~3세	4~6세	7~8세	9~12세	13~18세	
전체		9.9	2.1	18.6	24.5	33.2	21.7	100.0(1,055)
첫째 자녀 연령	0~3세	10.2	4.0	14.6	23.2	32.5	25.8	100.0(151)
	4~6세	10.4	1.2	8.6	29.6	34.6	25.9	100.0(81)
	7~8세	10.4	0.0	10.5	21.1	53.9	14.5	100.0(76)
	9~12세	10.8	1.6	7.3	26.6	41.1	23.4	100.0(124)
	13~18세	9.8	1.0	25.1	19.5	35.4	19.0	100.0(195)
	χ^2	1.302	42.657***					

*** $p < .001$.

3) 영유아 자녀를 위한 비용 지원 방식의 지원으로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지원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현금성 지원으로서 가장 직접적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정책은 아동수당 지원 제도임.

3

세부사업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육아정책분야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 재정 투입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먼저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50% 전후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 ◆ 지원금을 조정해야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연령,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른 차등 순으로 응답됨.

〈표 5〉 지원금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 : 보육료,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단위: %(명)

구분	지원금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				지원금 차등 조정 기준에 대한 의견				
	확대	유지	축소	계	자녀 연령	가구 소득 수준	취약 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시간	계
보육료	47.5	41.9	10.6	100.0(1,055)	28.5	44.0	18.6	8.8	100.0(613)
누리과정 지원	50.5	40.8	8.7	100.0(1,055)	26.9	41.9	22.1	9.1	100.0(625)
가정양육수당	54.9	33.6	11.5	100.0(1,055)	28.7	44.3	23.1	3.9	100.0(700)

-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50% 전후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은 보육료가 10.8%로 가장 많고, 누리과정 지원은 7.7%로 가장 적음.

〈표 6〉 지원 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 : 보육료,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단위: %(명)

구분	확대	유지	축소	계
보육료	50.2	39.0	10.8	100.0(1,055)
누리과정 지원	49.2	43.1	7.7	100.0(1,055)
가정 양육수당	52.1	38.2	9.7	100.0(1,055)

-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조정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여부가 60% 전후의 높은 지지를 받음.
- ◆ 저소득층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보육료의 경우 59.9%, 누리과정 지원 61.7%, 가정양육수당 59.8% 였음.

〈표 7〉 우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견 : 보육료,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단위: %(명)

구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자녀가구	기타	계
보육료	59.9	15.4	11.6	11.6	1.4	100.0(644)
누리과정 지원	61.7	14.7	9.5	12.7	1.5	100.0(600)
가정양육수당	59.8	14.3	10.7	13.8	1.4	100.0(652)

나. 아동수당 지원

- 한편,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지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8.2%로 가장 높았음.
- ◆ 현행 아동수당 지원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도 35.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임.
- ◆ 정치성향에 따라서 진보층 일수록 현행 정책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아진 반면, 보수층에서는 지원 자체는 찬성하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표 8〉 아동수당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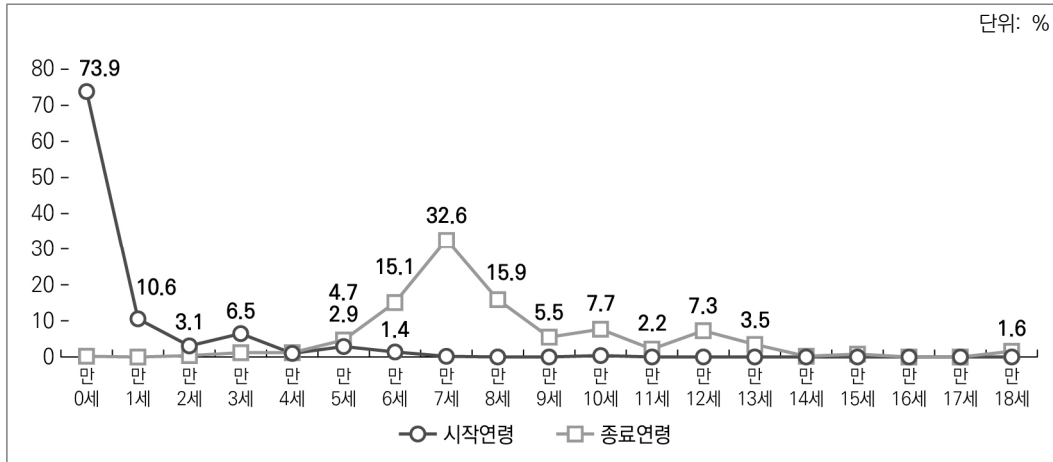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현재 정책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함	지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원 자체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함	계	
전체	35.3	48.2	10.8	5.7	100.0(1,055)	
정치 성향	보수	23.1	51.0	13.5	12.5	100.0(104)
	중도	29.3	53.2	11.2	6.3	100.0(474)
	진보	48.6	39.7	8.5	3.2	100.0(247)
	정치성향 없음	38.7	46.1	11.3	3.9	100.0(230)
	χ^2	43.549***				

*** $p < .001$.

■ 현행 아동수당 정책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00명의 응답자에 대해 지원 대상의 연령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 ◆ 아동수당 지원 시작 연령은 현행과 같이 0세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73.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아동수당 지원 종료 시점의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만7세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기는 함.
- ◆ 현행 기준보다 1세 많은 만 8세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15.9%로 다음을 차지했고, 현행 기준보다 1세 적은 만 6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15.1%였음. 또한, 만 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총 28.8%에 달함.



[그림 3]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에 대한 의견

주: 현행 아동수당 정책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509명에 한하여 질문함.

- 아동수당을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확장한다고 할 때 추가 지원 대상으로는 보육료 등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남.
-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수당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7.1%로 2순위를 차지함.

〈표 9〉 아동수당 추가 지원 필요 대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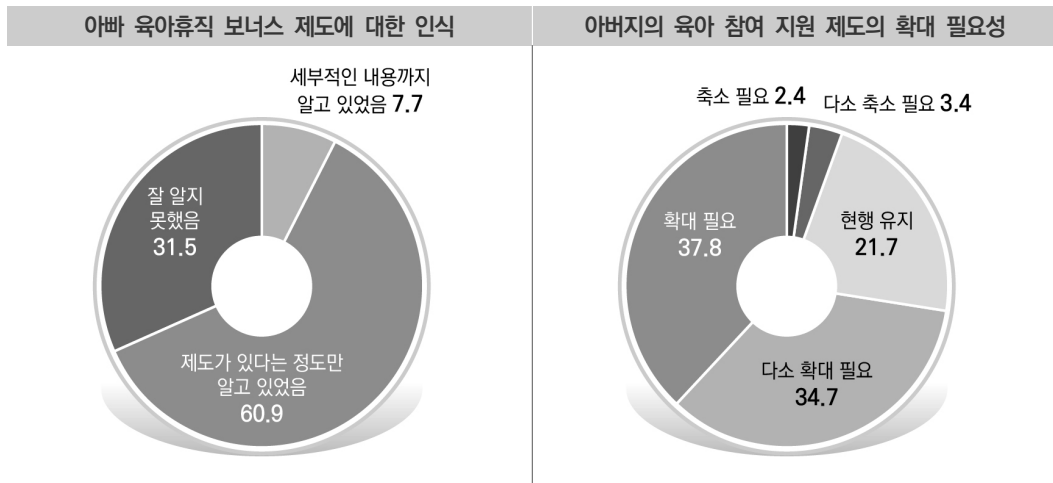
구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자녀가구	기타	계
추가 지원 필요 대상	72.9	37.1	27.3	24.0	1.4	100.0(509)

주: 지원 대상별로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질문한 결과로, 중복 응답되었음.

다. 육아휴직제도

-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인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68.6%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인지 정도를 보임. 다만,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안다는 응답이 60.9%로 다수임.
- ◆ 아버지의 육아 참여 지원 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대 필요가 37.8%, 다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34.7%, 현행 유지가 21.7%였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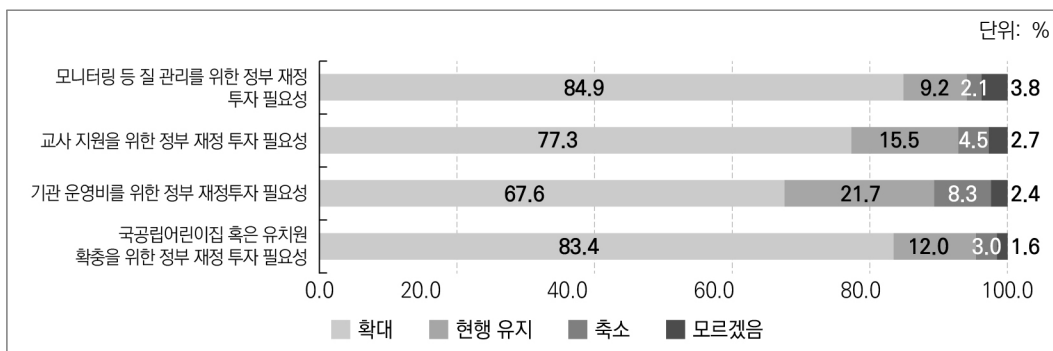
[그림 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에 대한 인식

주: 응답자는 1,055명임.

라.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지원

■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투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등 질 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 필요성이 84.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기관 확충의 필요성도 8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든 항목에서 10%미만 수준에 그침.



[그림 5]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재정투자에 대한 의견

주: 1) 각 항목별로 필요성을 각각 질문한 결과임.

2) 응답자는 1,055명임.

마. 육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 대표적인 세부사업을 제시한 상태에서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 사업을 질의한 결과에서 1+2+3순위 응답 기준 육아휴직 33.3%, 가정양육수당지원 33.1%,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32.2% 순이었음.

◆ 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19.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며, 2순위 응답에서는 육아휴직 14.1%, 3순위 응답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1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표 10〉향후 재정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사업

단위: %

구분	향후 재정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계	100.0	100.0	100.0	300.0
보육료 지원	19.3	6.0	6.0	31.3
가정양육수당 지원	17.0	10.2	5.9	33.1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5.4	3.2	4.0	12.6
아동수당	8.0	5.9	6.2	20.0
육아 휴직	12.0	14.1	7.1	3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	9.3	4.5	17.6
시간 연장반 및 시간제 보육 등 지원	2.2	4.5	3.7	10.4
한부모 가구 지원	2.9	4.0	5.1	12.0
다자녀 가구 지원	2.0	3.1	4.0	9.1
장애 가구 지원	2.5	3.8	4.0	10.2
저소득층 지원	8.7	9.0	10.1	27.9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9.4	11.0	11.8	32.2
기관 운영비	0.4	1.3	1.5	3.2
교사 지원	1.5	3.1	5.7	10.3
모니터링 등 질 관리	1.6	5.2	6.5	13.4
아동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0.9	2.6	4.7	8.2
아이돌보미 등 돌봄 지원	1.1	1.9	5.5	8.5
아동 관련 지역 인프라 지원	1.0	1.7	3.6	6.4
기타	0.2	0.0	0.0	0.2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실제 투입액에 비해 상당히 적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었으며, 실제 재정 투입 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 부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해당 부문의 정책적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 투입 규모가 적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 재정 투입 규모와 무관하게 육아정책분야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양육 부담 완화가 가장 우선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의 방향성은 특히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됨.
 - ◆ 다만, 이와 같은 재정 투입의 확대는 전반적인 재정 투입 규모의 확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현행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아동수당,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임.
- 한편,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과정에서 특히 아버지의 육아참여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가 요구됨.
 - ◆ 본고에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에서 현행 육아 휴직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에 비해 아버지 육아참여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게 나타남(최효미 외, 2019: 160-165).
 - ◆ 한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 아버지 육아참여 증진 사업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는 높은 편이지만, 세부적 내용에 대한 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강화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히 요구됨.
- 기존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은 영유아기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육아 지원의 지원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 영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은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정책 사업일 뿐 아니라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정책이므로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도록 함.
- ◆ 다만, 육아정책의 지원 대상을 영유아기를 넘어서는 만12세(초등학교) 자녀로 확장할 필요성 있음. 이때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 방식은 비용 지원, 정책 방향 또한 양육부담 완화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확장은 아동수당 지원의 연령 확대를 통하는 것이 정책 체감도 제고에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육아 가구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도 차등적 육아지원보다는 보편적 육아지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보편 지원의 바탕 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저소득층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음.
 - ◆ 현행 보편 지원의 비용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육아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보편 지원 체계 안에 저소득층 지원을 접목하는 것은 자칫 보편 지원 체계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추가 지원 등의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 한부모, 조손 가구 등도 저소득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으므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는 자연스럽게 이들 취약 가구를 포괄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Ⅰ 참고 문헌 Ⅰ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2019).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info/intro.php>(2020. 5. 6 인출).